

# 공유경제 참여자의 비즈니스 등록정책에 대한 인식과 심적기재: 온라인 발화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박수경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연구교수

## Study on Participants' Perceptions of Sharing Economy Policies : A Text Ming Approach to Online Community Posts

Soo Kyung Park  
Research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Yonsei University

요 약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개인들이 방 한 칸과 같이 작은 자원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다양한 부작용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이 만들어내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에 대한 자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정립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책은 표류하고 있으며, 다수의 참여자가 기존 정책에 불응을 선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기존 정책에 대한 불응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겨진 참여자들의 발화를 수집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그 심적기재를 5개의 주제로 도출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이다. 따라서 처벌이나 벌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억제 기제를 상정하는 것보다, 정책대상 즉, 현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수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이들을 정책순응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재들을 세밀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공유경제, 공유숙박, 참여자, 정책순응,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Abstract With the advent of online platforms, individuals have been able to trade small resources, such as a room, in the market. However, as there is no clear regulation on these economic activities, various side effects have emerged. Accordingly, the government reestablished related policies to resolve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se economic activities. However, the policy has not been implemented yet, and many participants do not comply with the policy.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ir perceptions in detail. For this purpose, a text mining technique was applied. Posts and comments from major online communities were collected. By applying the topic modeling technique, 5 topics were derived. Compliance with the government's policy is a voluntary deci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policy target. Therefore,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methods to induce them to conform to policy can be discussed in detail.

Key Words : Sharing Economy, Accomodation Sharing Business, Participants, Policy Compliance, Text Mining, Topic Modeling

## 1. 서론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은 방 한 칸이나 자동차 뒷좌석과 같이 일상적으로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유휴자원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2014년부터 ‘공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개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1], 경제활동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비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2].

온라인 플랫폼은 수요자 확보를 위한 광고 등 개인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투자가 필수적인 활동들을 대행해줌으로써 비즈니스의 진입장벽을 낮춰주었고, 그 결과 개인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였다[3].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해당 영역에 정부의 규제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4].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에 관한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규제의 공백(loop-hole)이 존재하였고[5], 정부의 과세권 약화, 공중의 안전 문제, 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6].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작용들이 보고되자 주요국의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경제활동이 만들어내는 의도치 않은 결과들에 대한 자정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정립하였다[7].

해당 정책은 각 국가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등록’을 강조하였다[3]. 등록은 그 자체로는 강력한 정책은 아니나, 참여자의 규모 파악과 과세를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유용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에어비엔비(airbnb)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난 분야이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해당 서비스에 호스트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하는 특정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후 자신의 비즈니스를 정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다[3]. 한국 또한 기존 숙박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과의 분쟁 예방을 정책목표로, 호스트는 기존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혹은 ‘농어촌민박업’의 기준을 따라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등록한 참여자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8].

이러한 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유숙박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에 등장한 것이기에 전문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과중하다는 것이다[9]. 이에, 정부는 ‘공유숙박업’을 신규 재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매개되는 숙박업을 수행하는 참여자들

이 정부에 자신의 사업을 등록할 것을 권고하였다[10]. 관련 논의는 2016년 시작되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11].

이렇게 정책이 표류하는 동안, 온라인 숙박공유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70% 이상의 참여자들이 기존 정책에 대한 불응(non-compliance)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적용하여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겨진 그들의 발화를 수집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심적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기존 논의

### 2.1 플랫폼으로 매개되는 숙박업을 둘러싼 이슈

에어비엔비와 같은 숙박업의 형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들도 있으나, 공유경제의 가치에 동의하는 국가들은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였다. 정책은 본래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유숙박의 등장으로 유발된 문제는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3].

Table 1. Policies of Sharing Accommodation Business

Challenge 1: Conflicts with Existing Local Residents	
Purpose of Policy	Exclusion of Professional Business Operation
Solutions	Introduction of Limiting Conditions (Setting the Sharing Period)
Region	Amsterdam(Netherlands), London(UK), Japan
Challenge 2: Conflicts with Existing Business	
Purpose of Policy	Exclusion of Unregistered Business Operation
Solutions	Imposition of Tax Obligation or Stopping Illegal Business Operation
Region	US, Paris(France)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전문적 사업자의 등장으로 원주민이 해당 지역에서 내몰리게 되는 현상),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호텔과 같은 기존 숙박업자와의 규제 불공평성의 문제)의 대두이다. 이에, 각 국가는 전문적 영업을 배제하고자 호스트 거주 시 공유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제시하거나 불법영업을 금지하고 과세하는

방안을 고안하였다.

한국은 위의 두 가지 갈등유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호스트로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관광진흥법」 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혹은 「농어촌정비법」 내 「농어촌민박업」 등으로 등록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sup> 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2년 도입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의된다. 해당 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설기준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되어있다. 이는 오피스텔, 원룸, 근린생활시설이 불가능함을 뜻한다. 그리고 등록기준으로는 건물의 연 면적(230㎡ 미만), 외국어 안내 서비스 가능, 소방시설(소화기 1개 이상, 객실당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비가 제시되어있다.

2009년 도입된 한옥체험업은 시설 기준이 한옥인 경우, 1995년 도입된 농어촌민박업은 지역이 도시가 아닌 농어촌지역이면 해당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은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은 내·외국인 투숙이 모두 허용되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외국인 투숙만 허용되고 내국인 투숙은 불가하다는 특성이 있다.

## 2.2 공유숙박업 관련 정책 논의

본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자신의 유휴 숙소를 거래하는 방식은 전통 숙박업에 대한 정의에서 존재하지 않던 것이었다. 따라서, 공유숙박업이라는 새로운 방식은 기존의 숙박업 분류체계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에어비엔비와 같은 플랫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업을 등록해야 한다. 일례로, 도시지역에서 호스트를 하고자 하면, 사람은 230㎡ 미만의 주거용 건물(오피스텔, 원룸, 근린생활시설 제외)에 소방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자신이 주민등록상 실거주해야 한다.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이거나 아파트일 경우 주민동의를 얻은 후 담당 지자체 혹은 동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공유숙박 플랫폼에 호스트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이러한 기준과 요건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공유경제의 본래 목적에 따라 자신의 유휴자원인 빈방을 일시적으로 공유해보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이러한 기준과 요건은 너무 과중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시된 것이다[12]. 더불어 논의가 집중된 사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 지자체 혹은 동사무소에 해당 업을 등록할지라도 내국인을 게스트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외국인 투숙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호스트뿐만 아니라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내 게스트에게도 문제를 발생시켰다. 현행 규정상 내국인이 도시지역에서 에어비엔비에 묵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행하게 된다. 실제로, 에어비엔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에어비엔비를 이용한 고객은 전체 고객의 69%인 것으로 보고됐다[13].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보고된 수치이기에 현재는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기존의 규제·정책이 사문화되고, 무신고 영업, 불법영업을 하는 참여자들이 증가하는 정책불응 현상이 나타나자 2016년 정부는 「공유민박업」 신설을 발표하였다. 공유민박업은 도시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할 수 있도록 세부요건을 제시하였다. 다만, 기존 숙박업 사업자들과의 갈등 방지와 전문적 사업자가 공유민박업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영업 가능일 수를 180일로 한정하였다. 해당 계획이 발표되자 공유숙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규제 개선을 통한 신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산업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2021년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여, 여전히 공유숙박을 둘러싼 참여자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여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자, 내국인의 국내여행의 수요가 높아지고, 도시지역에서의 자가격리를 위한 일시적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14].

이처럼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 논의가 표류함에 따라, 공유숙박은 기존 숙박업 체계에 따라 분류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에서 공유숙박에 참여하고 있는 호스트들의 70%는 미신고 영업을 하는 정책불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3. 이론적 배경

1)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3.1 공유경제와 참여자 관련 선행연구

공유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파편화되어 존재하는 개인의 유휴자원을 나누거나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15]. 온라인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소득창출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주었고[16], 그 결과 비경제활동인구나,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풀타임 일자리를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부가적 소득증대 수단이 되었다. 플랫폼 고유의 검색기능과 알고리즘을 통하여, 적은 자본으로 누구나 지리적·물리적 제한없이 마이크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17].

이에, 공유경제 태동 초기에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 시대에 개인이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 인식되었다. 이에, 공유경제 참여가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향상하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18]. 그러나 시장이 점차 커지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법적·제도적 문제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노동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에 법의 보호 및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의 법적지위를 논하는 학술적 논의들이 다수 진행되었다[19-20]. 또한, 이들의 비즈니스가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그들의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것과 과세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하였다[21]. 이처럼 그간 공유경제에서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학술적 논의가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그들의 역할과 책임성에 대한 논의들이 수행되고 있다[8, 22].

### 3.2 정책 순응의 심적 기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와 이에 필요한 수단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기본방침이다[23]. 그리고 규제란 정부가 민간의 자율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실패 현상을 방지, 치유하기 위하여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을 의미한다[24].

무수한 참여자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검토 끝에 정책과 규제를 구상하고 갈등과 협조 끝에 이를 집행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정책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25]. 정책 대상의 형태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과 규제는 효과적이지 않거나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발적인 준수, 즉 순응(compliance)이 매우 중요하다[26]. 순응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대상 집단이 정책에 대한 수용과 동의의 결정 여부를 표현하

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규정한 규칙 또는 목적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 특히 특정 행동 규정에 일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27]

정책은 대상 집단에 체화되는지에 따라 그 성공이 달라있기에, 정책집행에서 대상 집단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28]. 대상 집단이 정책에 현장 실행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인식할 경우,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인식하지 않으면 불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29-30]. 본래, 정책 대상이 순응의 비용과 편익(cost-benefit)을 계산하여 순응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정책 대상이 순응 비용-편익 계산을 바탕으로 한 문헌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풍부하다[25, 31-32]. 이들은 순응과 불응의 효용에 대한 개인적 인식을 토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불응의 비용보다 순응의 편익이 클 경우 순응을 선택하게 되고[27], 순응 비용이 과도하거나 불응의 제재가 약하여 불응의 편익이 증가할 경우 불응을 선택한다[33].

## 4. 연구방법 및 절차

### 4.1 텍스트마이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유숙박에 호스트 즉, 공급자로서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세밀하게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활용한다.

텍스트마이닝은 일정한 규칙이 없는 텍스트 데이터에 통계적 기술을 적용, 이를 규칙성이 있는 데이터로 정제·변환시킴으로써 그 패턴과 그 속에 숨은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이다[34]. 본 연구는 주요 사이트 내 공유숙박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관련 질문과 답변 댓글을 수집하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겨진 글들은 단일 이슈를 둘러싼 참여자들의 내부적 인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원으로 활용되고 있다[35]. 특정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거나[36], 특정 집단의 인식이나 고충을 분석하는데[37] 주요한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Fig 1과 같다. 주요 사이트 내 공유숙박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선별, 관련 게시판에서 질문과 답변 댓글을 1차적으로 수집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특정 단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다른 주제의 글들이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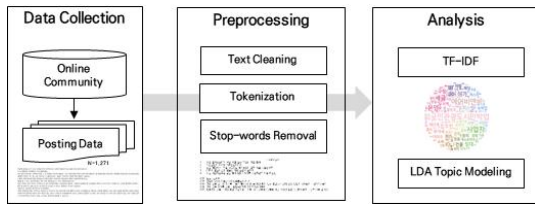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Flow

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일일이 읽고 검토하는 모니터링 방식을 병행하였다[38].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초 2016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정책 관련 질의응답 글 1,308건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2차 검토를 통하여 이 중 무의미한 문장(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등)을 선별·삭제하였다. 최종적으로 1,271건이 연구를 위한 최종 데이터셋으로 확정되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되었다. 첫째,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를 수행하였다. 텍스트 데이터의 올바른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정제하는 단계로서 형태소 분석과 개체명 인식을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석은 문장을 형태소로 분리 후 품사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진 명사를 추출하였다. 이후, 개체명 인식을 통하여 합성명사의 분절, 고유명사의 오분절(집/주인-집주인, 주민/센터-주민센터, 일반/주택-일반주택,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을 확인하고 보정하였다. 또한 온라인에 게재된 텍스트임을 감안하여 줄임말(근생-근린생활시설, 예비-에어비앤비 등)을 확인하여 보정하였다. 유사명사를 동일한 개체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환하고, 마지막으로 의미없는 단어(안녕, 감사, 댓글, 쪽지 등)를 제거하는 불용어 처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데이터를 구축한 후, 빈도분석 및 TF-IDF 분석을 수행하였다.

#### 4.2 LDA 기법을 적용한 토픽 모델링

분산된 논의를 주요 주제로 추출하기 위하여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수행하였다.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마이닝에서 사용하는 기법의 하나로, 텍스트 내 단어들에 주제에 포함될 확률을 파악하여, 의미론적 분석을 수행한다[39]. 구체적으로는 문서-단어 행렬을 기반으로 문서에 잠재된 토픽의 등장 확률을 추정한다[12].

본 연구에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활용하였다[40]. LDA는 텍스트 문서 내에는 단어의 집합체로서 토픽들이 혼합되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텍스트 문서 집단 내 토픽의 분포와 해당 토픽별 키워드의 생성확률에 기초한다. 따라서, LDA 기법을 적용할 경우, 토픽의 개수 설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토픽의 수 설정은 토픽 개수를 모형화하여 혼잡도(perplexity)와 일관성 지수(coherence score)를 비교하여 선정하였다[41-42].

## 5. 분석결과

### 5.1 단어 빈도분석 및 TF-IDF

빈도분석 결과, 상위 10위까지의 단어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에어비앤비, 등록, 허가, 운영, 가능, 주택, 세금, 신고, 합법이다.

이어,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를 통하여 문서 내 핵심어를 추출하였다. 10위까지의 단어는 다음과 같다. 에어비앤비(611.124),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565.129), 등록(495.331), 운영(479.101), 허가(459.415), 주택(439.313), 가능(409.416), 세금(401.364), 신고(396.884), 집주인(360.0197)이 순서대로 상위에 출현하였다. 이어 30위까지는 사업자등록(12위, 356.753), 합법(13위, 333.234), 부가세(15위, 322.318), 오피스텔(16위, 309.719), 불법(17위, 299.442), 구청(19위, 282.084), 거주(20위, 270.961) 등의 단어가 출현하였다.

현재의 정책 기준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빈도분석과 TF-IDF 분석결과 가장 상위에 출현하였다. 해당 단어와의 동시출현 분석결과 에어비앤비(557), 등록(492), 운영(377), 사업자등록(260), 합법(248), 구청(200), 호스트(191), 허가(171), 외국인(168), 적용(161), 주택(191), 숙박업(137), 원룸(137), 거주(129), 오피스텔(120)등의 단어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현재 호스트들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기준으로 비즈니스의 등록 및 운영방식과 조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5.2 토픽모델링: 정책에 대한 인식과 심적기재

이어, 이러한 텍스트들에 담겨있는 잠재적 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토픽의 수는 전체 데이터셋의 크기를 고려하여 2개에서 8개까지 모형화한 후 그 수치를 비교하였다. Fig 2와 같이, 토픽 수가 5개일 때 일관성 지수가 가장 높으면서, 혼잡도 지수 또한 어느 정도 개선되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에, 토픽의 수는 5개로 설정하였다(Coherence Score: 0.7071, Perplexity: -6.8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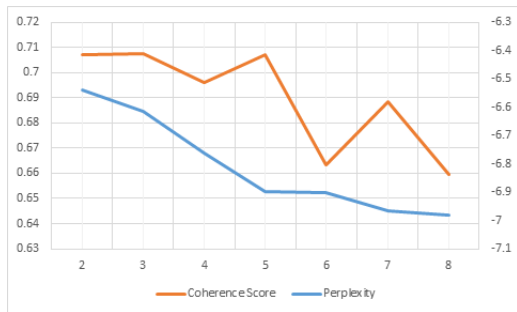


Fig. 2. Coherence Score and Perplexity

토픽모델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토픽(0.130)에 속한 키워드는 '등록, 에어비엔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운영, 주택, 합법, 사업자등록, 거주, 허가, 가능, 구청, 생각, 숙박업, 불법, 호스트, 동의, 문의, 재산세, 세금, 부가세'이다. 해당 토픽의 주제 유추는 LDA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토픽에 배타적으로 높은 비율로 속한 단어와 해당 토픽에만 속한 단어를 확인하여 수행하였다. '등록, 합법, 거주'가 본 토픽에 높은 비율로 속하였으며, 본 토픽에만 속한 키워드는 '동의'이다. 현재, 정책기준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준하여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등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호스트의 실거주와 동의의 확보이다. 호스트의 실거주는 1인이 1개 이상의 숙소를 운영하는 전문적 영업을 방지하는 조치이다. 실거주자가 유희공간을 빌려주는 경우만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특정 공간을 임대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다세대주택이거나 아파트일 경우 주민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12]. 수집된 원문을 살펴보면, 호스트들은 이 동의 확보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있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토픽의 주요 주제는 현 정책 기준에 따라 등록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필요조건에 대한 호스트들의 정보교환과 담론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두 번째 토픽(0.127)에 속한 키워드는 '세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고, 허가, 가능, 주택, 에어비엔비, 부가세, 숙박업, 매출, 아파트, 사업자등록, 집주인, 등록, 원룸, 외국인, 현재, 생각, 문제, 불법'이다. 이 중 '세금, 신고'가 배타적으로 높은 비율로 속하였고, '매출' 키워드는 본 토픽에만 출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토픽은 호스트

들의 세금과 관련된 논의로 유추할 수 있다. 본래, 세금 납부는 정부에 자신의 비즈니스를 등록하고 면허를 획득한 후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보면, 호스트들의 70%는 자신의 비즈니스를 등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이 왜 세금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집된 원문을 추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확인하였다. 원문을 확인하여 보면, 호스트들은 세금 납부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매출이 매우 작기에 과세의 대상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행위가 세금 납부의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왜 사람들이 비공식 경제활동(informal economy)을 수행하는가를 규명해온 연구의 맥락과 닿아있다. 우리가 숨겨진 경제(hidden economy)라고도 칭하는 비공식 경제활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층의 거리판매(street vending)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지만[43], 선진국 시장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한 생존 가능성을 테스트하면서 등장한다[44]. 실제로, 해당 비즈니스에 참여하면서 진입장벽이 낮고 자본 투입량이 매우 적었으며, 자신의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하기에 세금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아니라는 심적회계를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세 번째 토픽(0.125)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오피스텔, 에어비엔비, 등록, 불법, 생각, 가능, 운영, 합법, 허가, 사업자등록, 호스트, 아파트, 구청, 신고, 게스트, 숙박업, 원룸, 농어촌민박업, 거주'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이 중 '오피스텔, 불법, 원룸'은 타 토픽 대비 배타적으로 높은 비율로 속한 키워드이다. 공유숙박에서 오피스텔은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원칙적으로 공유숙박은 주거용 건물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오피스텔, 원룸 등 업무용 시설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문을 살펴보면, 호스트들은 독립적인 공간 즉,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에 여행객의 수요가 많기에, 수익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심적기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호스트들은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곳은 오피스텔이고, 용도허가 현황을 보면 아파트와의 구분이 불명확한데 굳이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오피스텔 임대를 통한 숙박업이 허용되면 임대료 상승세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상황이다[45]. 본래, 정책순응 연구에서는 근원적으로 개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바라보고, 이들이 불응으로 얻는 기대이익과 희생되는 기대비용을 계산한다고 가정한다[27]. 이들은 정책에 순응할 경우, 자신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비즈니스



자체가 불가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정책의 대상인 대상집단은 순응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순응여부를 결정짓는데[29], 정책에 현장 실태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을 때 불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30].

네 번째 토픽(0.101)의 키워드로는 ‘에어비앤비, 허가, 집주인, 운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사업자, 가능, 사업자등록, 세금, 확인, 문의, 숙박업, 매물, 숙소, 부동산, 월세, 신고, 상황, 원룸, 등록’이 나타났다. 본 토픽에 배타적으로 높은 비율로 속한 단어는 허가, 집주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이며, 본 토픽에만 출현한 키워드는 매물, 부동산이다. 이를 통하여, 해당 토픽은 공유숙박에 참여하기 위하여 특정 공간을 임대한 호스트들의 담론으로 유추할 수 있다. 최근 공유숙박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개인이 추가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손쉬운 창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12]. 그렇기에 부동산을 통하여 새로운 매물을 찾아 공유숙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지 혹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제3의 공간을 탐색하여 공유숙박에 참여할 경우 현재의 정책기준(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을 따르기 어렵다. 이에, 이들은 실제 거주지를 이전 등록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교류를 수행하였으며, 이것이 하나의 토픽으로 도출된 것으로 유추된다.

다섯 번째 토픽(0.112)에 속한 키워드는 ‘주택, 운영, 가능, 에어비앤비, 허가, 집주인, 법,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합법, 문제, 생각, 오피스텔, 신고, 사람, 사업자, 공유, 부가세, 세금, 월세, 숙박업’이다. ‘주택, 가능, 신고’가 배타적으로 높은 비율로 본 토픽에 속하였고, ‘법’은 본 토픽에만 출현하였다. 해당 키워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합법적으로 등록·신고가 가능한 주거형태에 대한 논의들로 유추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물의 유형은 건축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 원룸, 근린생활시설은 불가능하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상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 배치도, 평면도, 임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일 경우 주민동의서)를 준비하여 구청에 방문 후 등록하면 된다. 호스트들은 소유하고 있거나 집주인에게 임대한 공간은 각 건물의 특성이 상이하고, 공간을 분리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에 따라 의사결정도 상이하다는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공간

을 활용할 수 있는지 서로 질의하고 있었다. 정책순응 연구에서는 정책의 내용과 기준이 모호성(ambiguity)과 복잡성(complexity)을 갖는 경우 불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논의된 바 있다[26].

Table 2. Results of Topic Modeling

	Topic 1 Requirements for Business Registration
	Topic 2 Discussion of Tax Obligations and Conditions
	Topic 3 Accommodation Types to Maximize Profits
	Topic 4 Engaging in Business through Sub-lease
	Topic 5 Discussion of Conditions for Legal Operation

## 6. 결론

본 연구는 대표적 공유경제 서비스인 공유숙박을 중심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낮은 순응의 원인을 참여자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심적기재를 통해 유추해보고자 하였다. 본래, 정책은 그 목표가 바람직스러워야 하며, 그 수단 또한 바람직스러워야 한다[28, 32]. 그러나 그 ‘바람직스러움’의 판단은 주관적 가치판단이기에, 정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정책도 대상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30].

따라서 해당 정책에 대한 대상자 즉, 참여자의 인식을 세밀하게 조망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정책과 관련된 논의를 수행한 연구들 대부분은 정책 대상자가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추상적 성격의 제언적 연구를 수행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4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들이 온라인상에 게시한 글들을 수집하여 그들의 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인식을 포착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들의 온라인 발화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수행하였다. TF-IDF 분석과 토픽모델링을 기법을 활용하였다. 논의를 종합해보면, 이들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 허가, 운영, 가능, 주택, 세금, 신고, 합법 등과 같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정보교류를 수행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들이 정책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나, 이에 불응하고 있는 주요 원인을 개인의 심적회계 결

과라 유추하였다[26, 27, 29]. 토크모델링을 통하여 현재 참여자들은 1) 합법적 등록을 위한 호스트의 실거주, 동의 확보방안, 2) 정확한 매출 추산의 어려움과 생존가능성에 대한 불투명성에서 기인하는 납세이슈, 3)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오피스텔, 원룸) 건물 활용에 대한 기대이익, 4) 새로운 창업수단으로 실거주지 외 제3의 공간(부동산, 매물) 활용, 5) 건축물 기준 부합과 구청 요구 서류 준비 등의 고민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궁극적으로, 참여자가 자신의 사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정부는 그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소비자 간의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47]. 따라서, 이들이 정부의 정책과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48].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사업을 등록하는 것, 즉 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은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이다. 따라서 처벌이나 벌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억제 기제(deterrence mechanism)를 상정하는 것보다, 정책 대상의 정책을 둘러싼 이들의 담론을 탐색한 후, 이들을 정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재들을 세밀히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정부 관계자는 현 참여자들이 정책에 불응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이해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재개정 시 해당 조건들을 중심으로 재정비를 수행할 수 있다. 더불어,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참여자의 양성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3]. 해당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책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노출하지 않도록 이들을 정책안으로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영역에도 학문적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공유경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소비자 중심의 연구로 편중되어 있다[8]. 특히나, 공유경제 학술트렌드를 분석한 최근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특정 공유공간에 대한 설계 관련 연구, 서비스 관련 연구 및 의용의도나 만족도 관련 연구들과[49], 더불어 서비스 지속사용을 위한 이용자 행태연구, 거래를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관점의 연구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50]. 일부 연구들이 유희자원을 제공하는 참여자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되고 있지만[17, 18], 단순한 제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해당 플랫폼이 양면시장(two-sided market)임을 고려할 때 공유경제에 자신의 자원 및 서비

스를 공급하는 참여자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더욱 증대되어야 함에도, 아직 이에 대한 논의들은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책의 관점에서 공유경제 참여자를 이해하고, 정책순응을 둘러싼 그들의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경제 공급자들의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심적기제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정책순응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REFERENCES

- [1] R. Belk (2014). You Are What You Can Access: Sharing and Collaborative Consumption Onlin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7(8), 1595-1600. DOI : 10.1016/j.jbusres.2013.10.001
- [2] M. Cohen & A. Sundararajan (2015). Self-regulation and Innovation in the Peer-to-peer Sharing Economy.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Dialogue*, 82, 116.
- [3] S.K. Park (2017). *Policy Compliance of Resource Providers in Sharing Economy*, Yonsei University Doctoral Thesis.
- [4] S. Ranchordás (2015). Does Sharing Mean Caring: Regulating Innovation in the Sharing Economy. *Minnesota Journal of Law Science & Technology*, 16, 413.
- [5] S. Cannon & L.H. Summers (2014). How Uber and the Sharing Economy Can Win over Regulators. *Harvard Business Review*, 13(10), 24-28.
- [6] J. Owyang (2013). The Dark Side to the Collaborative Economy, Posted on June 18 2013, <http://www.web-strategist.com/blog/2013/06/18/the-dark-side-to-the-collaborative-economy>
- [7] J. Mair & G. Reischauer (2017). Capturing the Dynamics of the Sharing Economy: Institutional Research on the Plural Forms and Practices of Sharing Economy Organization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25, 11-20. DOI : 10.1016/j.techfore.2017.05.023
- [8] S.K. Park, K.T. Kwak & B.G. Lee (2019). Policy Compliance and Deterrence Mechanism in the Sharing Economy: Accommodation Sharing in Korea. *Internet Research*, 29(5), 1124-1148. DOI : 10.1108/intr-03-2018-0098
- [9] H.G. Kim (2017). Problems of Sharing Accommodation and Policy Directions. *Korea Tourism Policy*, 69, 83-87.
- [10]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The Guideline for Tourism Business*, Korea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orking Paper.



- [11] Chosun Biz (2021.11.22.), Among 220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ly Korea is Illegal for Koreans to Sharing Accommodation.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11/22/5DQVOOGYWJCYLGUIJ5CIH6LVJY/>
- [12] S.K. Park & B.G Lee (2019), A Text Mining Approach to the Analysis of Issues for Accommodation Sharing Business,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31(7), 209–229.
- [13] Chosun Biz (2019.09.26.). Airbnb "Only Korea has Regulations out of 191 countries",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0239.html](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26/2019092600239.html)
- [14] The JoongAng (2021.11.11.) Sharing Accommodation Business business not Enacted by Law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978>
- [15] A. Sundararajan (2017). *The Sharing Economy: The End of Employment and the Rise of Crowd-based Capitalism*. Mit Press.
- [16] D.F. Cheng (2014). *Reading between the Lines: Blueprints for a Worker Support Infrastructure in the Peer Economy*, Doctoral Dissertation,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17] S.K. Park & B.G. Lee (2018).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and Future Job Recognition of Resource Provider in the Gig Economy,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19(1), 141–154
- [18] S.K. Park & B.G. Lee (2018). An Exploratory Study on Participation in Sharing Economy for Work-Life Bala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3(2), 217–228.
- [19] S. Lee (2021). Revitalization of the Sharing Economy and Labor Law Protection System: Focusing on Recent Precedents and Discussions on Platform Workers in Germany, *Journal of Consumer Law*, 7(3), 125–153
- [20] J.H. Lee (2021). The Study of Legal Status and Responsibility of the Worker who Provide Labor in Sharing Economy, *2021 Journal of Consumer Law*, 7(4), 53–92
- [21] S.H. Hong (2020). A Study on the Income Tax Taxation Problem of Shared Accommodation Providers, *Wonkwang Law*, 36(2), 43–61
- [22] A. Farmaki, D. Stergiou & A. Kaniadakis (2019). Self-perceptions of Airbnb Hosts' Responsibility: A Moral Identity Perspectiv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21.
- [23] T.R. Dye (1972). *Understanding Publics Polic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 [24] W. Buhle (1979). The Origins and Costs of Regulation, *The Dialogue That Happened: Proceeding of Workshop on the Private Cost of Regu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5] R. Nakamura & F. Smallwood (1980). *The Policy Implementation*. New York: St. Martin's, 12–18.
- [26] J.E. Anderson (1984). *Public Policy-Making*, Orlando, Florida: Holt, Rinehart and Winston.
- [27] O.R. Young (1979). *Compliance and Public Authority*, Baltimore, The Jones Hopkins University Press. DOI: 10.4324/9781315064475
- [28] P. Sabatier & D. Mazmanian (1979). The Condition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A Guide to Accomplishing Policy Objectives. *Policy Analysis*, 481–504.
- [29] F.S. Coombs (1980). The Bases of Noncompliance with a Policy. *Policy Studies Journal*, 8(6), 885–892. DOI : 10.1111/j.1541-0072.1980.tb01179.x
- [30] J.G. Jung (1989). *Policy Decision Theory*. Seoul: Daemyung Publishing Co.
- [31] P.R. Edwards (1991). Choices that Increase Compliance. *Review of Policy Research*, 10(4), 6–27. DOI : 10.1111/j.1541-1338.1991.tb00276.x
- [32] J. Braithwaite (1993). Transnational Regulation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25(1), 12–30. DOI: 10.4324/9781315200361-9
- [33] S.C. Winter & P.J. May. (2001). Motivation for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Regulation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0(4), 675–698.
- [34] D. Yoon & S. Lee (2019). Consumers'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toward Airbnb: Text Mining of Consumer Experiences Posted in Online Community,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0(2), 173–192
- [35] J. Won, D. Lee & I. Park (2021). A Study on Investigating Perception of Food Delivery Platform Labor Using DMR Topic Modeling, *Innovation Studies*, 16(2), 175–210
- [36] W.H. Kim & E.H. Park (2021). Exploring Game Consumers' Perception in Online Game Community using Text Mining Approach: The Case of Reddit,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24(1), 73–83
- [37] H. J. A. Lim & S.E. Lee (2021). Exploring Nurses' Experience and Grievance: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using a Social Networking Serv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7(3), 169–180.
- [38] S. Lee, H. Kim & S. Jun (2016), Text-mining based Topic Analysis on Online Sexism,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3(3), 159–199
- [39] S. Noh (2020). Analysis of Issue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opic Modeling,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5), 75–87.
- [40] D.M. Blei, M. Ng & M.I. Jordan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The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 [41] S.K. Park, H.J. Lee & B.G. Lee (2021), Exploring Social Issues of On-demand Delivery Platform Participants,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7), 79–85.
- [42] S. Lee, I. Yoo & J. Kim (2020). An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AI) Education using Big Data: Based on News Articles and Twitt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9–16.
- [43] S. Pena (2000). Regulating Informal Markets: Informal Commerce in Mexico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0(9/10), 37–67.
- [44] C.C. Williams & A. Martinez (2014). Do Small Business Start-ups Test-trade in the Informal Economy? Evidence from a UK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2(1), 1–16.  
DOI : 10.1504/ijesb.2014.062127
- [45] Chosun Ilbo (2020.01.18.), Airbnb Side Business is Popular among Young People,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2456.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7/2020011702456.html)
- [46] M. Cho & H. Lee (2017), Improvement Issue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through Meta-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9), 1–14.
- [47] J.M. Leaphart (2016). Sharing Solutions: An Analysis of Taxing the Sharing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Tulane Law Review*, 91, 189.
- [48] C. Laurell & C. Sandström (2017). The Sharing Economy in Social Media: Analyzing Tensions between Market and Non-market Logic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25, 58–65.
- [49] S.H. Kim, N.S. Jang & K.W. Kim (2021). Academic Trend Analysis of Shared Economy Based on Text Mining an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6(2), 15–34.
- [50] C.C. Lee, J. An, H. Kim & W. Kim (2020), A Study on the Academic Efforts for the Progress of ICT-Based Sharing Economic: Using meta-analysis in MIS and other Related Fields,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21(4), 129–156

## 박수경(Soo Kyung Park)

[장학]



- 2017년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술경영(경영학 박사)
- 2017년 ~ 2019년 : 연세대학교 IT정책전략연구소 전문연구원
- 2019년 ~ 현재 :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연구교수
- 관심분야 :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 기

술경영, IT 정책

· E-Mail : sk.park@yonsei.ac.kr